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한 2022회계연도 결산” - 국민불안·불편 초래 등 5대 분야 168개 쟁점사업 면밀히 심사할 것 -

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심사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줄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탓과 일선공무원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하여 재정운용에서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심사에서 정부의 실정(失政)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

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5대 분야 168개 쟁점사업을 확인하였으며,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 심사를 통해 168개 쟁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하려고 한다.

5개 분야는 ①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불안·고통 초래, ② 중요한 사업임에도 문재인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③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④ 불합리한 제도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⑤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로 나누어진다.

집행관리가 부실한 사업 중 문재인정부 역점사업과 재난안전사업을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정부가 바뀌면서 발생한 특수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비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5대 분야에 대해 각 부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6개 사업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실책 등으로 국민불안·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여가부의 2023 잼버리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국무조정실, 여가부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 등을 점검하였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지원할 시설에 대한 부실 문제로 조기 영국·미국·싱가포르 참가자들의 퇴영과 파행을 초래하였다.

대회 초기 부실한 운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재인정부에서 사업준비한 기간이 길다면서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체 총사업비 1.171억원 87%인 1,014억원이 집행되는 등 실질적인 대회준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이었다. 행사준비가 부실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소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도 정부의 실책이 여실히 드러난다. 2022년에 집행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타당성조사 20.6억원이 집행되는 등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정부는 노선을 변경하였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자 소관부처 장관은 사업을 취소하였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고통만 커졌다. 점입가경인 것은 소관부처 장관은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무책임하게 남탓으로 넘기는 또 다른 사례를 남기고 있다.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에서도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조성 등을 위해 49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용산 국방부에 입주 후에야 노후시설을 발견하였고 2023년 시설개선 관리 및 개선 사업에 51.7억원을 반영하여 노후시설 개보수를 시행중에 있다. 현장답사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당초 이전에 496억원으로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추가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도 무능함이 확인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은 400.5조원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대비 약 40조원 감소해서 올해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가용한 재원으로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하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 등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감안하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다.

2022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관리)은 451개 사업에 25.4조원인데 이중에 6,917억원이 이월되었고 1.2조원이 불용처리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의 2022년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이 다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하천정비 237억원, 국가하천유비보수 261억원, 수문조사시설설치및개선 64억원, 연안정비 60억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도로 위 안전을 위한 도로유지보수, 위험도로개선 사업 등도 2022년 이월액이 441억원, 1,440억원으로 이는 최근 4년간 이월액 중 가장 큰 규모이다.

<2022년 풍수해 대비 사업 中 불용, 이월 과다 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환경부	국가하천정비	410,028	375,314	351,155	94	23,737	423
환경부	수문조사시설설치및개선	69,807	69,253	61,423	89	6,397	1,433
환경부	국가하천유지보수	259,922	276,306	247,953	90	26,108	2,245
기상청	기상레이더운영	9,164	10,930	9,786	90	529	615
기상청	지상·고층기상관측망확충및운영	19,262	19,203	17,963	94	968	272
기상청	해양기상기지구축및운영	2,556	2,987	1,715	57	1,059	213
기상청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23,741	25,503	23,126	91	1,186	1,191
해수부	국가어항	262,586	268,491	251,393	94	11,950	5,148
해수부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36,949	37,005	34,256	93	832	1,917
해수부	연안정비	57,261	57,845	49,108	85	6,039	2,698
해수부	재해안전항만구축	124,799	121,263	112,555	93	7,737	971
해수부	태풍피해복구(항만)	23,402	23,402	20,020	86	3,125	257
해수부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118,509	120,870	110,193	91	6,849	3,829
해수부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19,035	19,901	16,575	83	1,310	2,016

셋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역점사업 중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나 민생과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상수도 붉은 물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022년 실행률은 67%, 고용창출장려금 집행률은 69% 등 민생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집행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행률은 63%, 뉴딜펀드 누적투자집행률은 2021년 35.7%였는데 2022년에는 10.7%로 하락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들에서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향공모합 사업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하여 불용시키는 사례도 다수 있다.

넷째, 과도한 불용과 이전용으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국채발행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예산이 2.1조원이나 불용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도 묵살한 채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3천억원 가량 증액하였다.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현실화해서 감액조정하였다면 2조원이나 되는 불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마련된 재원을 민생사업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과 민생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들도 다수 확인하였다.

불투명하게 집행되다 보니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정기 지급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물가에 국민들의 소비지출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지원, 임대주택 입주대상 요건으로 소득·자산·무주택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제도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지하차도, 신림동 세모녀 수해참사 등 풍수해사업,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6건, ▲경향공모합과 ▲소상

공인 2차보전 불용, ▲뉴딜펀드 소극적 운용 등 대표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 을 요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오늘 언급된 168개 사업들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 민주당 168석 국회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회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임을 다시 밝힌다.

2023. 8. 27.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훈식

〈5대 분야별 결산쟁점 168개 사업〉

1. 정부의 무능·실책 등으로 국민불안, 고통 초래 26개 사업

- [대경처] 대통령 집무실 졸속 추진에 따라 집무실 이전 관련 설계비, 감리비 등 미집행
- [행안부]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공사 완료했는데 입주 후에야 노후시설 확인하고 2023년 예산에 시설개선 공사 추가 반영
-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예비비 편성, 재원부족으로 이전용하여 추가 재원 확보해 국방부 재배치 사업했는데 예비비 불용액 발생한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
-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예비비 편성, 재원부족으로 이전용하여 추가 재원 확보해 국방부 재배치 사업했는데 예비비 불용액 발생한 시설유지관리 사업
-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예비비 편성했는데 예비비 불용액 발생한 주요기관 기본경비 사업
- [법무부] 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에 소요된 예산의 불법집행 지적
- [금융위]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불용률 72.9%
- [보훈부] 보여주기시 외부행사에 집행되고 있는 보훈기념행사 사업
- [보훈부] 정치 편향된 국제보훈교류행사
- [보훈부] 8만원어치 반찬 흠친 생계곤란 6.25 참전유공자 초래한 생활조정수당
- [보훈부] 절차 지연으로 위탁병원 진료예산 대부분 불용
- [기재부] 22년에 작성한 국세수입 추계 결과 23년 수입조에 달하는 세수결손 초래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료 부적절한 지출
- [국토부] 통합공공임대(용자)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 [국토부]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지원실적 저조
- [복지부]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속한 정상화 및 관리부실 책임자 문책
- [고용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법개정 후 시행까지 1년여의 기간동안 준비 없다, 법시행후 준비 및 홍보안 마련으로 집행부진 초래
- [교육부] 사업목적이 왜곡되어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교육부] 평생교육법에 따르지 않고 집행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사업
- [교육부] 실집행이 부진한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 [문체부] 무리한 청와대 개방 홍보를 위한 예산 전용
- [문체부] '청와대 가을 특별전 예산' 전용 후 불용
- [문체부] '청와대 장애인예술인 특별전'관련 문체부의 산하기관 작품 구매 중용 및 산하기관의 절차 위반 작품 구매
- [여가부] 2023 세계잼버리 파행 자초한 준비 부족과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저조

2.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16개 사업

- [환경부]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국가하천정비사업

[환경부]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환경부]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하천유지보수

[기상청] 강수예측 정확도 향상에 중요한 기상관측차량의 도입 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한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기상청]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공사 및 감리 계약 기간 연장으로 이월액이 발생한 기상레이더 운영 사업

[기상청] 제3 해양기상기지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의 4차례 유찰(무응찰)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액이 발생한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기상청] 항공구름관측레이더 구입 등 조달발주 후 유찰에 따른 계약 절차 장기간 소요로 이월액이 발생한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해수부] 연례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여항 사업

[해수부] 조위관측소 신설 공사 기간연장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해수부]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정비

[해수부]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재해안전항만구축

[해수부]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태풍피해복구(항만)

[해수부]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해수부]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국토부]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유지보수

[국토부]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도로개선

3. 중요한 사업임에도 문재인정부 추진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19개 사업

[방사청] 경향공모함 사업의 전액 불용

[금융위] 뉴딜펀드 적극적 운용 촉구

[국조실] 문재인정부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예산은 종료하고, 윤석열정부 규제혁신추진단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도 대다수 불용

[기재부]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불용처리

[기재부] 정책성과 고려 없이 무리하게 불용처리한 혁신성장활성화 사업

[기재부] 정책성과 점검 없이 무리하게 불용처리한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국토부] 실집행이 과도하게 부진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환경부] 수소차 보급사업의 매우 부진한 집행

[환경부] 집행이 저조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환경부] 집행 부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환경부] 실집행이 부진한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 불용액 과다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집행부진으로 예년보다 불용액 과다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적부족으로 예년보다 불용 과다 발생 및 제주특별자치도 압류방지통장 미적용에 따른 행정미비 시정 필요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불용액 과다

[고용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예산 집행률 43%에 불과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세사업 평생크레딧 집행부진
 [교육부] 집행이 부진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여성가족부]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 일방적 중단 사태에 따른 낮은 집행률

4.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54개 사업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집행률 부진
 [외교부]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집행률 부진과 기본경비로의 이용
 [국세청] 세무조사 활동이 과도하게 임의적으로 이뤄져 발생한 조사활동지원 사업예산 과다 불용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사업에서 법적근거 없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에 예산 편성하였다가 전액 불용
 [기재부] 예산 반영 필요성 의문시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기재부] 일반용역비 전용하여 증액시켜 놓고 불용처리한 협동조합활성화사업
 [기재부] 불용률이 높은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기재부] 전용으로 감액시켰음에도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기재부] 전용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집행한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사비
 [기재부] 전용을 남발하면서 감액한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기재부] 국회에서 확정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면서 까지 이전용한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기재부] 정책연구비 등 편성해놓고 불용처리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
 [기재부] 2차 추경에서 감액, 전용으로 감액하였음에도 불용액 발생한 역내 금융협력사업
 [기재부] ADB 총회 홍보 위해 당초 예산의 2배 초과 집행
 [기재부] 국회 확정예산에 없는 비목 등을 신설하는 등 세목조정으로 예산을 집행한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
 [기재부] 집행이 저조한 대외경제협력강화
 [기재부] 연례적인 전용 및 세목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경제정책국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경제정책국)
 [기재부] 일반수용비 과다 편성 후 불용처리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
 [기재부] 일반수용비 과다 편성 후 불용처리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
 [기재부] 대규모 불용 발생 지적에도 2조원 넘게 불용액이 발생한 예수이자상환
 [산업부] 에너지 분야 이차보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필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미가동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산업부]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정확한 수요파악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중기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지자체 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실집행률 저조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및 불용액 과다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의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사고를 예측 실패로 불용액 과다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의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사고를 예측 실패로 불용액 과다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구상권관리 사업의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사고를 예측 실패로 불용액 과다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환급 사업의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사고를 예측 실패로 불용액 과다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의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사고를 예측 실패로 불용액 과다

[중기부]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 추경으로 예산 증액했으나 불용한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사업

[과기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의 교육 공간 확대 구축 중단 필요

[과기부]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사업 중 '네트워크산업 육성 기반 조성' 내역사업 중 내내역사업 일부를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과기부] 지자체 보조금 사업의 잦은 이월 및 불용에 따른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재정 낭비

[과기부] 집행가능성을 무시한 출연금의 전액교부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 재정 낭비

[국토부] 이·전용을 통해 사업비 증액하였으나 조정금액이상을 이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국토부] 이·전용을 통해 사업비 증액하였으나 조정금액이상을 이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국토부]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사업의 집행 실적 저조

[산림청] 연도말 예비비 배정으로 산림재해대책비 이월 부적정

[농림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연례적 이월 및 불용발생 개선 필요

[농림부] 연례적인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 지연 문제

[농림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이월 과다

[해수부] 경영이양 직불사업의 실적저조

[해수부]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의 과다 예산 편성으로 이월액 발생

[해수부]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전용 반복

[해수부]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의 연례적 이월액 발생 반복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실집행 부진

[환경부] 실집행 부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부] 실집행 부진한 자원순환촉진지원

[환경부] 실집행 부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고용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70.2% 불용

[교육부]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교육부] 고질적으로 사업집행이 부진한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

[문체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연례적 투자실적 저조

5. 불합리한 제도개선, 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53개 사업

- [법무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특수활동비의 정기지급 의혹 등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 [법무부]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의 특수활동비 정기지급 의혹 등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의 특수활동비 정기지급 의혹 등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 [법무부] 공공수사 사업의 특수활동비 정기지급 의혹 등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 [법무부] 마약수사 사업의 특수활동비 정기지급 의혹 등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 [법무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업의 특수활동비 정기지급 의혹 등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 [법무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업의 특수활동비 정기지급 의혹 등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 [행안부]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강화 필요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 [통일부] 정책연구개발(R&D) 사업과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연구용역 중복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인 제2하나원 정상화 필요
- [방사청] 장보고-Ⅲ Batch-Ⅱ 후속함 건조사업 원가인상 통제장치 마련 필요
- [방사청]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Ⅱ[R&D] 사업에서 방위사업법에 따른 ROC 충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산업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사업의 경제성 검토후 사업추진여부 결정 필요
- [산업부] 반도체현장인력 단기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 대책 필요
-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국제공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
- [산업부]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 방안 검토 필요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 방식의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 [산업부]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실효성 제고 필요
- [중기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중기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필요
- [중기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
-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집행저조 및 전통시장 안전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필요
- [과기부] 실질적 효력 미흡한 '국방분야 SW·AI 역량 강화'사업은 중단하고, 일부는 국방부로 이관 필요
- [과기부] AI+X 확산에 따라 각 부처 필요에 따라 인공지능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 필요
- [과기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서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 관리 표준지침 준수 필요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핵심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조속 완공 필요
- [국토부]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관리강화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사업 국민임대(용자) 사업 대상 요건 개선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사업 국민임대출자 사업 대상 요건 개선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사업 행복주택(용자) 사업 대상 요건 개선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사업 행복주택출자 사업 대상 요건 개선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사업 영구임대출자 사업 대상 요건 개선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사업 다가구매입임대(용자) 사업 관리감독 강화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사업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 관리감독 강화

[농림부] 재해복구지원단가 실거래가의 60%수준으로 농가지원 미흡, 재해대책비는 불용

[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감소 및 재보험 수익발생으로 재보험금 대폭 불용

[농림부] FTA 피해보전직불 연례적 불용

[농림부]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사업 재편성 필요

[농림부]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불용 시정 필요

[농림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재편성 필요

[농림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재편성 필요

[해수부] 조속한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도입 및 차질 없는 운용 필요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활성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필요

[복지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다양성 확대 필요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기능 강화 필요

[환경부] 철저한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가 필요한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수거 사업

[고용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해, 일반회계전입금 모성보호육아지원의 30%이상으로 확대 필요

[고용부]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내실화 필요

[고용부]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정권 입맛에 따른 지원이 아닌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고용부]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장

[문체부] 세종학당 파견교원 처우 개선 필요